

야권,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정무위, 與 불참속 의결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 “입법 독재”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민주유공자법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하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의 부의 요구를 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고 두 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 24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순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위원 1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의료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지원을 규정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두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권한은 커지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내주 열릴 듯

대통령실·민주 1차 실무회담 “회담 일정, 추후 다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23일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지 못해 추후 2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58분에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전준호 비서실장과 제가 만나서 준비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회담은 40여분간 진행됐으

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실무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영수회담은 내주 진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스

국힘 ‘관리형’ 비상대책위 구성 가닥

비대위원장 4선 이상 거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3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조배숙·주호영·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동

일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4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지도부를 오래 비워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혁신형’ 보다는 전당대회를 신속하게 치르기 위한 ‘관리(실무)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차영수 도의원,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지원 조례’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강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 1개, 16개 시·군에 17개 있고, 내년엔 영암, 함평, 장성에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와 시·군 청년센터의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청년정책사업의 성과와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해 청년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제도적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여야,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 합의 ‘불발’

채상병 특검법 등 이견 보인듯 두 원내대표, 29일 재협상키로

여야는 23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전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욱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본회의에 자동부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

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최종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재발의한 ‘제2 양곡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이라며 반

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개의를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두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달 3일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의 정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

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의 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와 별도로 소수의 의정 대표가 따로 모여 밀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서울=김선욱 기자